

##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와 교훈

인하대학교 정영태

### 1. 들어가는 말

(1) **정치(또는 정치활동)**는 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나 혁명적 정치(insurrectionary politics)와 같은 **국가권력의 획득을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집행하도록 하는 활동, 간단히 말해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노동자 또는 그들의 조직인 노동조합 또는 정치조직인 정당이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은 다양하다.

(2)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들이 정치영역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활동과 정치세력화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나 혁명적 정치(insurrectionary politics)와 같은 국가권력획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과 같이 국가권력행사와 관련된 활동도 포함된다. 즉, 노조가 추구하는 정치활동에는 ①정당·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 ②서구의 조합주의체제(corporatism)하에서처럼 노조대표가 직접 국가정책심의·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social corporatism), ③그동안 우리나라 노조들이 많이 활용했던 파업이나 농성, 성명서 등에 의해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pressure group politics), ④무정부주의적 신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의 전통이 강한 라틴계 국가의 노조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총파업 등에 의한 직접행동(direct action)을 통해서 (정당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국가권력을 해체하는 방식(syndicalist politics)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의 우리 사회가 추구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치활동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3) 정치세력화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형태**와 그 조직이 채택하는 **활동방식**은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혁명전의 러시아에서처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인 정치체제하에서는 비합법적인 조직(비합전위정당)의 폭력혁명에 의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는 합법적인 조직(합법정당)의 선거를 통한 국가권력기구로의 진출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가장 효율적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국회와 청와대로의 진출)에 의한 정치세력화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물론, 이것(노동자대표에 의한 국가권력 장악)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에서의 (특히 조직적) 지지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의 지지기반만으로 노조/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따라서 혁명적 방식에 의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거나 여타의 합법적인 절차와 통로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장

악하거나 국가권력내로 진출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왜 중요한가? 첫째, **노조와 정당은 각각이 활동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가 (제도적으로나 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각의 영역은 서로 다른 규칙과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논리나 규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주요 조직형태는 노동조합과 정당, 두 가지다. 노조와 노동자정당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규칙이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규칙과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다 당면하고 직접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지지를 호소해야 할 대상이 달라지고, 결국은 두 조직 간의 갈등 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조합원의 실리향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노동조합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할수록, 조합 내 민주주의가 관철되면 될 수록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국민전체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모든 계급·계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국민정당은 물론 계급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조차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전체의 이익대변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노조와 정당은 역할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처럼 조직력과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노조가 직접 선거후보를 내세우고 지지운동을 할 경우 노조가 본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투시기와 선거가 겹칠 경우, 노조가 직접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조합원은 물론 간부들조차 경제적 조합주의와 기업별노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노조와 정당은 경제(또는 시장이나 사업장)와 정치의 영역에서 각각 맡은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셋째, 노조와 노동자들이 한국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反자본/親민주의 이념적·정책적 지향성) 현실의 노동자들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자본주의생산방식의 구조적 특성상 노동자들은 다른 어느 계급/집단보다 가장 반(反)자본주의적이고 친(親)민주주의적이고, ②(잠재적 조직력)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집단은 (사회구성체라는) 구조적인 수준에서의 단일한 이해관계(즉, 임노동자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으며, ③(노동자계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위치가 주는 위협능력) 1996-7년 총파업이 보여주었듯이, (특히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은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단결된 행동(예, 파업)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위력을 가질 수 있으며, ④(항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보다 풍족한 재정력) 노동조합이라는 반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십시일반(十匙一飯)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느 시민·사회집단보다) 풍부한 재정적 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국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 보도록 한다. 이하에서 정치세력화는 그 주체가 노조인 경우와 정당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 2. 한국의 사례

(1)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1) 개괄

|   |  |
|---|--|
| <p><b>민주노총</b></p> <p>1990. 1. <b>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결성</b><br/>         1990. 5. <b>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결성</b><br/>         1993. 6. <b>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결성</b><br/>         - 전노협, 업종회의, 현충련, 대노협이 주축이 되어 발족<br/>         1994. 11.13 <b>민주노총준비위결성</b><br/>         - 95년 상반기 사회개혁투쟁을 임금인상 투쟁과 결합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민주노조 진영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역할을 시작<br/>         - 7월부터 정책세미나,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를통해 강령, 규약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조 직건설 본격시작<br/>         - 조합원 1인당 1만원의 민주노총 건설기금 운동전개<br/>         1995. 10. <b>제12차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강령,규약(안)을 확정</b><br/>         - 민주노총준비위는 1년 동안 13회의 대표자회의, 16회의 운영위원회, 40회의 집행위원회, 2번의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를 가지면서 민주노총 창립을 준비<br/>         1995. 11. <b>민주노총 창립선언</b></p> |  |
| <p><b>한국노총</b></p> <p>1946.3.10 <b>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결성</b><br/>         1949.11~12 ICFTU(국제자유노련)창립회원으로 참가(런던, 75개국 참가)<br/>         1954. 4 <b>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로 개편</b><br/>         1960. 11 <b>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개칭</b><br/>         1961. 5 노동단체 해산 )최고회의포고 제6호)<br/>         1961. 8 한국노동단체 재건 조직위원회조직<br/>         1961. 8. 30 <b>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 결성</b> (산하16개 산별노조와 1개 연합노조)</p>   |  |

<표 1> 한국의 노동조합과 정치세력화 전략

|        | 전평 (1945) | 한국노총 (1945)  | 전노협(1990)    | 민주노총 (1995)   |
|--------|-----------|--|--------------|---|
| 조합원 수  | 50만명(?)   | 1950년대: 21-28만 명<br>1987년: 126만 명<br>1995년: 122만 명<br>2000년: 92만 명<br>2010년: 76만 명                 | 1990년: 20만 명 | 1995년: 39만 명<br>2000년: 60만 명<br>2010년: 56만 명<br>*국민노총: 2만 명 *미 가입: 36만 명                              |
| 정치활동방식 | 정당의 기간조직  | <b>1987년 이전:</b> 국가·자본에 의한 지배(국가조합주의)<br><b>1987년 이후:</b> 등거리, 특정 정당 지지 (중앙), 보수/자유주의정당 후보-노조 독자후보 | 직접행동 (조직수호)  | <b>1997년 이전:</b> 진보정당에 대한 개별적지지, 노조후보<br><b>1997년 이후:</b> 진보정당 지지, 부문할당에 의한 진보정당과 인적 결합 및 선거 시 배타적 지지 |
| 연계 정당  | 조선공산당     | <b>1987년 이전:</b> 자유당 등 반공보수정당<br><b>1987년 이후:</b> 보수정당, 자유주의정당                                     | 민중당          |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진보정의당   |

2) 1987년 민주화 이후

<표 2> 한국 노동조합의 노선과 정치세력화 방안

|          | 전 노협<br>(90. 1)  | 민주노총 준비위(94. 11)<br>-민주노총(95. 11)   | 한국노총<br>(61.8, 88. 11, 95. 2)  |
|----------|--|---|--|
| 궁극<br>목표 | ①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br>화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구조<br>의 개혁<br>②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br>일                        | <b>1994년 11월</b><br>①전체 국민의 삶의 질 개선<br>②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br>③세계평화의 실현<br><br><b>1995년 11월</b><br>①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br>참된 민주사회의 건설<br>②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br>③노동기본권 쟁취<br>④경영참가 확대<br>⑤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br>⑥노동조건개선과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br>⑦독점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 및<br>제도개혁<br>⑧세계평화의 실현 | <b>1961년 8월</b><br>①사회정의와 산업민주화<br>②노동기본권의 수호창달<br>③복지국가건설<br><br><b>1988년 11월</b><br>자주적 민주조직역량의 확고화<br><br><b>1995년 2월</b><br>①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br>②혁명적 계급투쟁배격과 편협한 경제<br>주의 극복<br>③임금·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신<br>장<br>④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활권보호와<br>이해 조화<br>⑤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br>⑥민족통일과 세계평화에의 기여 |
| 당면<br>목표 | ①국가와 자본의 탄압 극복<br>②노총의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적<br>비민주적 노조운동 극복<br>③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실현 (노<br>동조건의 개선, 노동기본권쟁<br>취) | <b>1994년 11월</b><br>①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br>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척결,<br>산업개혁의 추방, 남녀평등<br>②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br>의 건설<br>③정치세력화   | <b>1961년 8월</b><br>조국근대화의 전진을 막는 일절의 독<br>소를 발본색원<br><br><b>1988년 11월</b><br>여당편향의 정치활동청산  |
| 주요<br>수단 | ①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역량강<br>화<br>②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br>③제민주세력과의 연대강화<br>④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br>조직 건설            | <b>1994년 11월</b><br>①미조직노동자의 조직, 조직의 확대<br>강화<br>②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br>③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과 조<br>합내 민주주의 강화<br>④제민주세력과의 연대<br><br><b>1995년 11월</b><br>①노동자의 정치세력화<br>②민주세력과의 연대<br>③산별노조건설<br>④노조운동의 통일<br>⑤국제노동운동의 역량강화  | <b>1988년 11월</b><br>①참다운 자기혁신<br>②각 정당의 노동 관련 정책 평가<br>③노동자의 권익 옹호하는 정당을 공<br>개지지<br><br><b>1995년 2월</b><br>①기업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br>여<br>②정치활동전개<br>③노동조직의 통일<br>④민주적 타 운동과의 연대강화  |

(2) 정당

<표 3> 한국의 노동자 정당

|              | 조선공산당<br>(1945. 8)                  | 진보당<br>(1956. 11)   | 사회대중당 등<br>(1960-61)   | 민중당 (1992)   | 민주노동당<br>(2000)                        |
|--------------|-------------------------------------|---|--|--|--|
| 국제정세         | 미소협력 -> 경<br>쟁과 대립(냉전)              | 냉전의 고착, 심<br>화  | 냉전;<br>유럽의 전후복구,<br>쿠바혁명   | 소련해체, 중동<br>유럽 사회주의<br>붕괴  | 남북화해와 협<br>력; 아시아 금융<br>위기 극복          |
| 국내정세         | 모스크바3상회의<br>(1945. 12) 이후<br>좌우대립격화 | 한국전쟁, 이승<br>만정권의 부정부<br>패와 독재   | 빈곤, 부정선거,<br>부패, 4월 혁명과<br>군사쿠데타   | 3당합당(1990.<br>1); 진보세력에<br>대한 억압적인<br>정책                                     | 김대중 정부(구<br>조조정, 햇볕정<br>책), 자유민주주<br>의 |
| 건설주체         | 일제하 사회주의<br>운동가                     | 해방정국에서 민<br>주주의독립전선,<br>한독당, 한민당,<br>민족자주연맹,<br>대한노총, 건국<br>동맹, 조선노동<br>당 참여자 | 해방정국에서 근<br>로인민당, 민족자<br>주연맹 등의 중도<br>좌파와 중도파 출<br>신, 1950년대 진<br>보당 등 정치인 | 1987년 대선 시<br>독자후보파(민중<br>정당), 후보단일<br>화파나 전민련<br>참여자, 민연추,<br>전노추, 노정추<br>등 | 진정추, 민중정<br>치연합, 전국연<br>합, 민주노총        |
| 이념           | 혁명적 사회주의                            | 민주사회주의와<br>평화통일론  |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 노동자/노조<br>관계 | 노조에 대한 정<br>당의 지배                   | 노조 기반 부재  | 노조 기반 부재   | 노조 기반 부재   | 민주노총의 배타<br>적 지지                       |

## 조선공산당

- 1922. 2 일본유학파의 '동우회'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주의단체가 결성됨
- 1923. 6 서울에 코민테른(코르뷰로국내부) 설치 (화요회의 김재봉)
- 1924. 4 조선노동총동맹, 노선청년총동맹 결성, 이를 기반으로 조선공산당(김재봉), 고려공산청년회(박헌영) 결성, 코민테른의 지도 하에 들어감
- 1925. 11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 (신의주, 검거)
- 1925. 12 제2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강달영, 권오설)
- 1926. 6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 (6·10만세운동을 통한 3·1운동 재현시도, 좌절)
- 1926. 12 제3차 조선공산당 (세칭 ML당) -> 1927년 신간회 창립에 동참
- 1928. 2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
- 1928. 3 제4차 조선공산당 재건, 7월 검거
- 1928. 12 코민테른의 '12월 테제' (조선공산당 승인 취소,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
- 1930. 9 프로핀테른(ProfinternL 적색노조 인터내셔널)의 '9월 테제' (적색노조/농민조합운동 전개, 이를 기반으로 한 조선공산당 재건 시도, 실패, 지하화)
- 1940. 12 공산당 세력 일당타진 (박헌영만 지하로)
- 1945. 8. 20 조선공산당 재건(박헌영, 여운형, 허헌, 김원봉 등)
- 1946. 6. 22 북조선공산당 (김일성)
- 1946. 7 5월의 조선정판사 사건을 이유로 조선공산당 불법화
- 1946. 8. 29 북조선노동당 (연안파의 조선신민당과 합당)
- 1946. 11. 28 남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의 합당)
- 1949. 6. 24 북조선노동당의 남조선노동당 흡수 후 6월 30일 조선노동당 창당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1945. 11. 5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 (50만명)**
- 1946. 9 총파업
- 1947. 미군정의 **좌익노동운동단체 불법화, 지하로**

## 진보당

1954년 11월 소위 사사오입개헌 파동을 계기로 여당인 자유당과 대통령 이승만의 신망이 크게 떨어지자, 재야세력들은 강력한 단일야당을 구축하여 차기 정·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꾀하고자 하였다. 당시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과 무소속동지회, 그리고 그 밖의 무소속 의원 등 60명이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원내외의 전 야당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조봉암도 포섭대상이 되었으나, 신당조직촉진위원회의 반대로 1955년 9월 18일 창당된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조봉암·서상일(徐相日)·박기출(朴己出)·신숙(申肅) 등 혁신세력들은 별도로 혁신계 신당을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1956년 1월 26일 진보당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 15일로 예정된 정·부통령선거에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로 조봉암을, 부통령 후보로 서상일을 지명하였으나, 서상일의 사양으로 박기출을 대신 선임·지명하였다.

정·부통령선거 중반전에서 박기출 후보는 사퇴하였는데,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조봉암 후보는 216만 표를 획득, 차점자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상일계가 조봉암계와 조직상의 의견대립으로 진보당추진위원회에서 탈퇴**하자, 조봉암계는 1956년 11월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진보당 결당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 및 김달호(金達鎬), 간사장에 윤길중(尹吉重) 등을 선출하고 정강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후,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 당시 거의 절대적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던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주창(主唱)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북한 정권과 그 배후의 국제공산세력인 소련 및 중국이 주장하는 중립국 감시위원단 감시하의 총선거안과 같은 주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 접선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정부는 1958년 2월 25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함으로써 진보당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조봉암은 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었다.

- 위키백과

<표 4> 1960년 4월 혁명 직후 진보정당

|          | 사회대중당(1960.11.24 결성)  | 사회당(1960.11.27 결성)  |
|----------|---|---|
| 이념       | 민주사회주의<br>-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산주의에 반대   | 민주사회주의<br>- 공산당과 기지일철의 독재세력을 타도, 자유를 수호하고 품위 있는 민주정치의 실현  |
| 이행 전략    | 의회제민주주의와 점진적 이행<br>- 좌우 어느 형태를 불문하고 폭력혁명과 독재정치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정권획득 후라도 의회제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킴   |   |
| 정당 형태    | 합법국민정당<br>(특정의 계급에 봉사하지 않고 널리 국민의 계층층에 의해 운영되고 국민의 이익을 수호·발전시키는 정당)   | 합법국민정당  |
| 주요 지지 기반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기술자, 관리자, 자유직업자 등 근로하는 전체 국민과 특히 청년, 지식층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결성된 정당   | 과학자, 기술자, 예술자 및 일반지식인층과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자를 비롯한 전체 「서비스」계급 및 유능하고 양심적인 자본가 등 광범한 국민대중을 기반으로 함   |
| 주요 정책 강령 | - 중요산업의 국유화, 사회화(노자공동결정 등), 정부규제, 농업 및 중소기업에서의 협동체제(생산협동화에 기초한 농업법인화하고, 농업법인은 회사 및 협동조합 형태로)<br>- 시장원리와 계획원리를 조화한 혼합경제(무질서의 자유경제와 경직화된 계획경제 배제)<br>-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UN과 협의하여 민주적·평화적으로 민주사회주의가 실현되는 조국통일을 추구<br>- 노동자에 대한 생산성에 근거한 이익분배방식, 기업별노조 탈피 산업별노조 정비, 노사 공동결정 | -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의 공유<br>- 계획적 경제체제, 독점과 모든 형태의 착취 폐지<br>- 민주적인 남북한 제정당 및 사회단체가 자유적인 분위기에서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엔의 협조 하에 민주주의승리에 의한 정치적 통일을 지향<br>- 대일 국교정상화<br>-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장려 |

|          | 혁신당(1961.1.8 결성)   | 통일사회당(1961.1.21 결성)   |
|----------|--|---|
| 이념       |  | 민주적 사회주의<br>-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형태<br>-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폐기,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며 독재정치를 합리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전통을 배반  |
| 이행 전략    | 만사를 공개·평화·합법적 절차를 밟아 실행할 것   | -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정권을 담당하고 국민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완수할 것<br>- 대중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농민, 중소기업자, 도시소비자, 청년, 학생, 부녀, 제대군인, 실업자 등의 대중조직과, 그 밖의 모든 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제휴를 유지<br>- 우리 당이 영도하는 대중투쟁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보수정권이 대중투쟁의 제요구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의 퇴진과 의회의 해산을 촉구할 것   |
| 정당 형태    | 합법국민정당   | 합법국민정당  |
| 주요 지지 기반 | 애국가, 혁명청년, 노동대중, 양심적 지식인들과 초당파적으로 총연합하여 공동투쟁   | - 농민, 노동자, 근로인테리, 중소기업자, 애국적 자본가와 가정주부를 포함하여 맘을 흘려 일하는 기쁨과 괴로움을 아는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정당   |
| 주요 정책 강령 |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자유, 평등, 우애를 기본으로 삼아 새로운 원칙, 새인물로 재편성하여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새사회를 건설 | - 중요산업의 국영·공영, 국공영기업의 민주적 관리, 정부규제, 농업과 중소기업의 협동조합화<br>-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에 계획성을 도입, 계획관리와 시장원리를 조정한 혼합경제. 그러나, 단계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지향<br>- 자주적 태도로써 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통일은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성취할 것(유엔에서 승인된 중립제국의 감시 하에 유엔이 새로 파견하는 경찰군이 상당한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남북총선을 통한 통일의 실현. 통일한국 중립국화)<br>- 노동자에 대한 생산성에 근거한 분배방식, 기업별노조 탈피 산별/직업별 노조발전,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 민중당

80년대 후반 재야운동권에서는 기존의 장외투쟁과 병행함과 동시에 제도정치권 내부에서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혁신정당(革新政黨)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 독자출마론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권 합법정당 창당 논의 결과 1989년 11월 20일 이우재, 장기표 등은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을 이끌어온 인사들을 주축으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90년 4월 '민주연합추진위원회'에 참가하였으나 선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이부영 등과 의견대립을 보이다가 결국 1990년 11월 10일 한겨레민주당 계열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민중당을 창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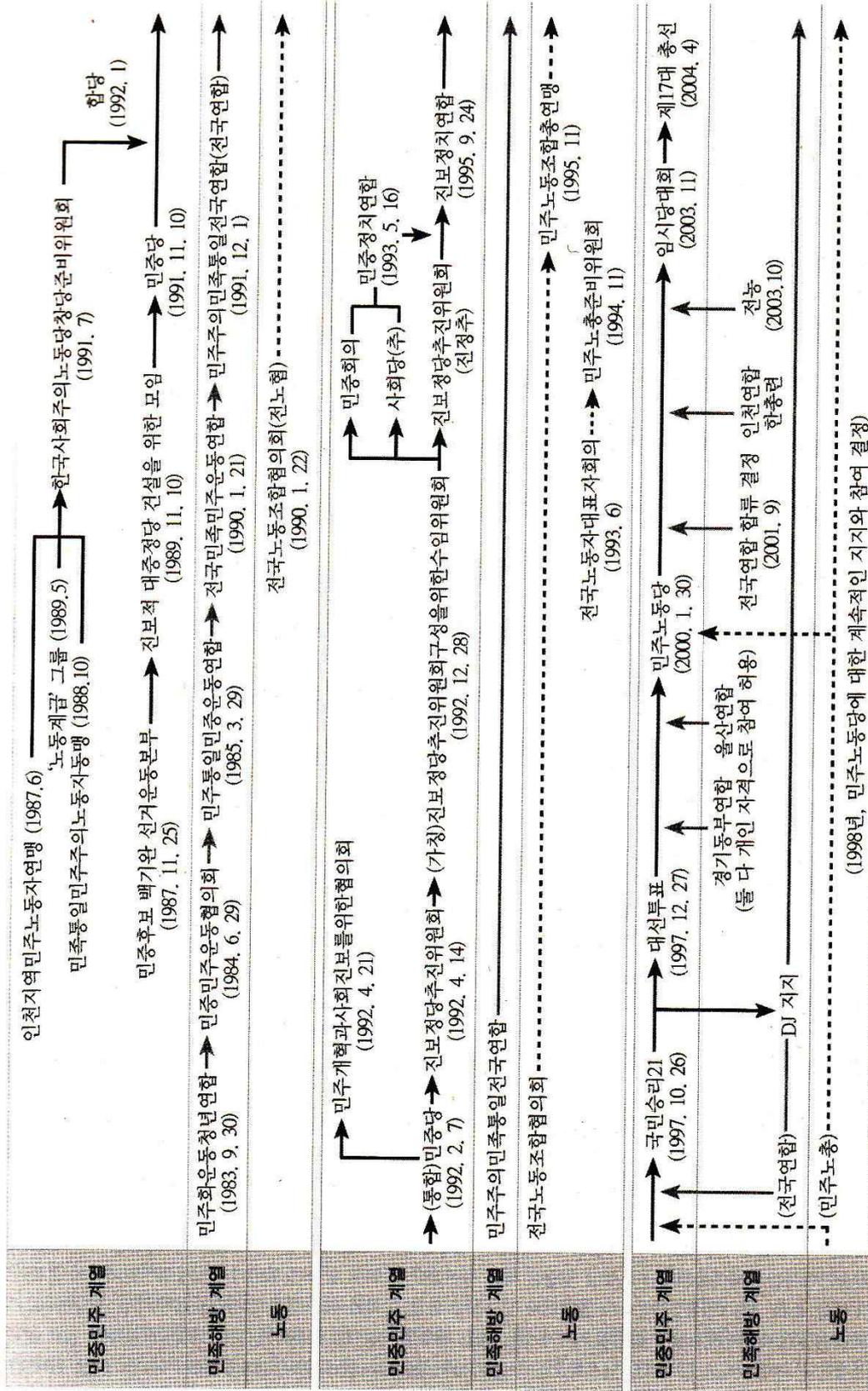
상임대표 이우재(李佑宰), 정책위원장 장기표(張基杓), 사무총장 이재오(李在伍)가 선임되었다. 민중당은 상임대표위원 이우재, 정책위원장 장기표, 사무총장 이재오, 교수위원장 오세철 등의 중앙지도부와 51개 지구당으로 구성되었다.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군부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약속하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1991년 1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 선거에서 4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명이 당선되었고,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1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평균 6.2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여, 몇일 후 정당법에 의거해 해산되었다.

민중당의 진보 성향 일부는 건설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등에 흡수되었고, 일부는 민주노동당으로 갔으며 현재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노동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재오, 김문수(金文洙) 등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金泳三)에 의해 발탁되어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으로 건너갔으며,(이우재도 그 쪽으로 건너갔으나 훗날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갔다) 현재 새누리당에 이르고 있다.

- 위키백과

그림 1 민주노동당의 파벌 형성 및 민주노동당 창당



### 3. 요약과 교훈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전위정당과 기간조직(해방 3년의 전평), 노조나 노동자와 연계 없는 진보정당(1950년대의 진보당, 4월 민주혁명 직후 5월 군사쿠데타 직전의 여러 진보정당, 1987년 대선 무렵 한겨레민주당 등 여러 진보정당들, 1990년대 초반의 민중당), 노동조합의 반공권위주의국가와 자본에 대한 협력자(19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맹과 그 후신인 1950년대의 대한노총,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말까지의 한국노총), 노동자의 직접행동(총파업 등)과 노동자후보전술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추구한 전노협과 창립 초기의 민주노총(1987년 이후 한국노총도 노동자후보전술을 채택하기도 함), 국가정책과정에서의 직접참여(1998년 일시적으로나마 합의정신에 의해 작동된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창당 추동과 인적, 제도적 연계에 기반을 둔 정치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사실상 거의 모든 유형의 정치활동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다.
- (2)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협력과 그에 대한 대가로 간부들의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직을 정치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했던 1987년 이전의 반공주의 보수 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주적이고 변혁지향적인 반자본주의 진보 노조와 정당들도 **한국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없었다.**(cf. <표 5>). 그나마 해방 3년의 전평과 공산당, 1956년 대선 시기의 진보당, 1996년 겨울 날치기 노동법 철폐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에 힘입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정도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파워조직의 영향력, 2005년과 2013년 참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성과를 논한다면, 조직노동자 특히 대기업 조직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직접행동을 통해) 방어한 것 정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파워 조직의 영향력

| 영향력   |       |      | 신뢰도   |       |      |
|-------|-------|------|-------|-------|------|
| 2006년 |       |      | 2005년 |       |      |
| 순위    | 기관    | 점수   | 순위    | 기관    | 점수   |
| 1     | 현대차   | 7.14 | 1     | 삼성    | 7.17 |
| 2     | 삼성    | 6.97 | 2     | 현대차   | 6.94 |
| 3     | SK    | 6.50 | 3     | 한법재판소 | 6.50 |
| 4     | 한법재판소 | 6.36 | 4     | SK    | 6.45 |
| 5     | LG    | 6.06 | 5     | 대법원   | 6.31 |
| 6     | 경찰    | 6.02 | 6     | LG    | 6.22 |
| 7     | 검찰    | 5.97 | 7     | 검찰    | 6.12 |
| 8     | 대법원   | 5.77 | 8     | 경찰    | 6.11 |
| 9     | 국세청   | 5.74 | 9     | 전경련   | 5.92 |
| 10    | 전경련   | 5.66 | 10    | 국세청   | 5.77 |
| 11    | 한나라당  | 5.21 | 11    | 청와대   | 5.56 |
| 12    | 교총    | 5.01 | 12    | 참여연대  | 5.28 |
| 13    | 청와대   | 4.93 | 13    | 경찰    | 5.20 |
| 14    | 경찰    | 4.85 | 14    | 한나라당  | 5.12 |
| 15    | 전교조   | 4.84 | 15    | 전교조   | 5.08 |
| 16    | 참여연대  | 4.79 | 16    | 국정원   | 4.99 |
| 17    | 뉴라이트  | 4.75 | 17    | 교총    | 4.98 |
| 18    | 국정원   | 4.71 | 18    | 한국노총  | 4.89 |
| 19    | 민변    | 4.63 | 19    | 열린우리  | 4.83 |
| 20    | 한국노총  | 4.38 | 20    | 뉴라이트  | 4.83 |
| 21    | 민주노총  | 4.31 | 21    | 민주노총  | 4.81 |
| 22    | 민주당   | 3.90 | 22    | 민변    | 4.75 |
| 23    | 민주노동당 | 3.83 | 23    | 민주노동당 | 4.45 |
| 24    | 열린우리당 | 3.55 | 24    | 열린우리당 | 2.96 |

| 영향력 |       |      | 신뢰도       |       |      |
|-----|-------|------|-----------|-------|------|
| 순위  | 기관    | 점수   | 순위 (2011) | 기관    | 점수   |
| 1   | 삼성    | 7.22 | 1         | 현대자동차 | 6.16 |
| 2   | 현대자동차 | 6.88 | 2         | 삼성    | 6.08 |
| 3   | 검찰    | 6.58 | 3         | 한법재판소 | 5.86 |
| 4   | 한법재판소 | 6.57 | 4         | SK    | 5.80 |
| 5   | SK    | 6.51 | 5         | LG    | 5.74 |
| 6   | 경찰    | 6.33 | 6         | 대법원   | 5.33 |
| 7   | 국세청   | 6.31 | 7         | 금감원   | 5.26 |
| 8   | 청와대   | 6.22 | 8         | 경찰    | 5.10 |
| 9   | LG    | 6.21 | 9         | 감사원   | 5.07 |
| 10  | 금감원   | 6.18 | 10        | 청와대   | 5.05 |
| 11  | 대법원   | 6.15 | 11        | 국세청   | 4.69 |
| 12  | 감사원   | 6.11 | 12        | 새누리당  | 4.49 |
| 13  | 새누리당  | 6.09 | 13        | 전경련   | 4.49 |
| 14  | 국정원   | 5.51 | 14        | 검찰    | 4.48 |
| 15  | 전경련   | 5.43 | 15        | 전교조   | 4.30 |
| 16  | 전교조   | 4.80 | 16        | 국정원   | 4.02 |
| 17  | 민주당   | 4.48 | 17        | 참여연대  | 3.89 |
| 18  | 한국노총  | 4.40 | 18        | 경찰    | 3.88 |
| 19  | 경찰    | 4.22 | 19        | 한국노총  | 3.82 |
| 20  | 민주노총  | 4.12 | 20        | 민주당   | 3.81 |
| 21  | 참여연대  | 3.95 | 21        | 민주노총  | 3.67 |
| 22  | 뉴라이트  | 3.82 | 22        | 뉴라이트  | 3.22 |
| 23  | 통합진보당 | 3.52 | 23        | 통합진보당 | 3.18 |
| 24  | 정의당   | 2.83 | 24        | 정의당   | 2.62 |

※ 표 읽는 법 : 10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24개 조직 순위를 매겼지만, 두 조직의 점수 차이가 0.15점 이하일 경우 동계획적으로 의미가 없음. ※ 2011년의 경우 통합진보당·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으로 조사

(3) 한국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객관적 여건과 주체적 조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의 국가는 미국의 반소노선(194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말)과 반중노선(198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중국의 경제강국으로의 부상 이후)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신)냉전구조 속에서 막강한 군대와 경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공·권위주의국가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남북대립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위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반공권위주의국가 체제 하에서는 국가 즉 집권세력과 그 후원국(미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sup>1)</sup> 이러한 막강한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공 권위주의 국가는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자와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크나큰 제약이 되었고, 현재도 그렇다.

1) 권위주의는 반공자본주의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필요성만이 아니라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는 단지 국가와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는 보편적인 사랑인 인(仁)을 말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왕조체제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신분사회를 정당화해 주었다. 유교의 예(禮)가 그것이 이용되었다. 유교는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는 귀천(貴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인 예라고 보았다. 예는 구분하고 질서를 지우는 기능, 즉 인륜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고 보았다”(이동희, 2005:159-160).

둘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장 중요한 물질 기반이 되는 **노동자계급의 수와 조직력**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상당히 진척되는 1980년대 이전에는 전체 피고용인 중 임금노동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조직으로 결합된 노동자는 더욱 적었다(<표 6>, <표 7>). 그 결과 해방정국에서 1960년대까지 활동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지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이 비노동계급적 성격을 띄고 있어 진정한 노동조합운동, 정당운동이 되기 어려웠다. 반면, 산업화가 고도로 진척된 1980년대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자의 비중과 수가 전체 피고용자 중 과반이 되었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출범할 무렵에는 2/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조합과 정당의 물질 기반을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체제(따라서 낮은 단협적용률)인데다가, 조직률마저 낮아 노동조합과 정당의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위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표 6> 한국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1963-2010)

| 연도   | 전체                       | 비임금근로자          |                 |                        | 임금근로자            |                 |                 |                         |
|------|--------------------------|-----------------|-----------------|------------------------|------------------|-----------------|-----------------|-------------------------|
|      |                          | 자영업주            | 가족종사자           | 소계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소계                      |
| 1963 | <b>7,529</b><br>(100.0)  | 2,817<br>(37.4) | 2,361<br>(32.4) | <b>5,178</b><br>(69.8) | 1,421<br>(18.9)  |                 | 930<br>(12.4)   | <b>2,351</b><br>(31.3)  |
| 1970 | <b>9,618</b><br>(100.0)  | 3,286<br>(34.2) | 2,586<br>(26.9) | <b>5,872</b><br>(61.1) | 2,728<br>(28.4)  |                 | 1,018<br>(10.6) | <b>3,746</b><br>(38.9)  |
| 1980 | <b>13,684</b><br>(100.0) | 4,651<br>(34.0) | 2,569<br>(18.8) | <b>7,220</b><br>(52.8) | 5,164<br>(37.7)  |                 | 1,300<br>(9.5)  | <b>6,464</b><br>(47.2)  |
| 1985 | <b>14,970</b><br>(100.0) | 4,679<br>(31.3) | 2,187<br>(14.6) | <b>6,866</b><br>(45.9) | 6,714<br>(44.8)  |                 | 1,390<br>(9.3)  | <b>8,104</b><br>(54.1)  |
| 1990 | <b>18,085</b><br>(100.0) | 5,068<br>(28.0) | 2,067<br>(11.4) | <b>7,135</b><br>(39.4) | 5,938<br>(32.8)  | 3,171<br>(17.5) | 1,840<br>(10.2) | <b>10,950</b><br>(60.5) |
| 1995 | <b>20,414</b><br>(100.0) | 5,569<br>(27.3) | 1,946<br>(9.5)  | <b>7,515</b><br>(36.8) | 7,499<br>(36.7)  | 3,598<br>(17.6) | 1,802<br>(8.8)  | <b>12,899</b><br>(63.2) |
| 2000 | <b>21,155</b><br>(100.0) | 5,864<br>(27.7) | 1,931<br>(9.1)  | <b>7,795</b><br>(36.8) | 6,395<br>(30.2)  | 4,608<br>(21.8) | 2,357<br>(11.1) | <b>13,360</b><br>(63.2) |
| 2005 | <b>23,486</b><br>(100.0) | 6,172<br>(26.3) | 1,499<br>(6.4)  | <b>7,671</b><br>(32.7) | 7,917<br>(33.7)  | 5,056<br>(21.5) | 2,212<br>(9.4)  | <b>15,185</b><br>(67.3) |
| 2010 | <b>23,829</b><br>(100.0) | 5,592<br>(23.5) | 1,266<br>(5.3)  | <b>6,856</b><br>(28.8) | 10,086<br>(42.3) | 5,068<br>(21.3) | 1,817<br>(7.6)  | <b>16,971</b><br>(71.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9, 2012.

<표 7> 노사관계 주요지표

| 연도   | 노동조합    |        | 노사분규  |          |          |            | 임금근로자(천명) |
|------|---------|--------|-------|----------|----------|------------|-----------|
|      | 조합원(천명) | 조직률(%) | 발생건수  | 참가자수(천명) | 손실일수(천일) | 파업성향(일/천인) |           |
| 1970 | 473     | 12.6   | 4     | 1        | 9        | 2.4        | 3,746     |
| 1975 | 750     | 15.8   | 52    | 10       | 14       | 2.9        | 4,751     |
| 1980 | 948     | 14.7   | 206   | 49       | 61       | 9.5        | 6,464     |
| 1985 | 1,004   | 12.4   | 265   | 29       | 64       | 7.9        | 8,104     |
| 1986 | 1,036   | 12.3   | 276   | 47       | 72       | 8.5        | 8,433     |
| 1987 | 1,267   | 13.8   | 3,749 | 1,262    | 6,947    | 755.8      | 9,191     |
| 1988 | 1,707   | 17.8   | 1,873 | 293      | 5,401    | 562.0      | 9,610     |
| 1989 | 1,932   | 18.6   | 1,616 | 409      | 6,351    | 611.4      | 10,389    |
| 1990 | 1,887   | 17.2   | 322   | 134      | 4,487    | 409.8      | 10,950    |
| 1995 | 1,615   | 12.7   | 88    | 50       | 393      | 30.8       | 12,736    |
| 1996 | 1,599   | 12.1   | 85    | 79       | 893      | 67.7       | 13,200    |
| 1997 | 1,484   | 11.1   | 78    | 44       | 445      | 33.2       | 13,404    |
| 1998 | 1,402   | 11.4   | 129   | 146      | 1,452    | 118.1      | 12,296    |
| 1999 | 1,481   | 11.7   | 198   | 92       | 1,366    | 107.9      | 12,663    |
| 2000 | 1,527   | 11.4   | 250   | 178      | 1,894    | 141.8      | 13,360    |
| 2005 | 1,506   | 9.9    | 287   | 118      | 848      | 55.8       | 15,185    |
| 2010 | 1,643   | 9.7    | 86    | 40       | 511      | 30.1       | 16,971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 1999, 2013. (단결 + 단협적용률)

셋째, 유교의 세속주의와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강조와,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해 확산·강화되고 있는 금전만능주의 또는 물질주의를 들 수 있다.<sup>2)</sup> 금전만능주의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 제일주의를 일컫는다. 인생의 목적 역시 돈을 모으는 데 두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돈을 신격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즉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고, 이로 인해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다.<sup>3)</sup>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 인권과 민주주의, 공동체의 목표, 법치와 도덕·규범 준수 등 진보적 노동자 정치사회세력이 지향하는 가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sup>4)</sup>

2) 유교의 현세적 삶에 대한 강조는 쉽게 세속적 구복과 연결되었다. 조선시대 이후 한국인들의 삶의 최고 목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는 현세적 성공이었다. 가문의 번영을 위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왕가나 권문세족(權門勢族)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높은 벼슬을 하는 세속적인 성공이 입신양명의 길이고 효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 유교의 현세중심주의와 현실의 재앙을 없애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무교가 결합하여 현세에서의 물질적 행복을 이상적 삶으로 생각하는 현세적 물질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수복, 2012: 110-112).

3) KT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85%가 관계가 있다고 답했고 8.8%만이 관계가 없다고 말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았다(KTV, 굿모닝 투데이, 2013. 2. 16). 한국 직장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반면 중국 직장인들은 행복의 조건 1위로 건강을 들었다. 1일 채용 포털 잡코리아가 중국의 차이나HR닷컴과 공동으로 양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 응답) 한국 응답자의 45.4%는 경제적 여유를 꼽았다. 그 다음은 건강(40.4%), 화목한 가정생활(30.9%), 만족스러운 직장생활(2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 직장인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건강(85.9%), 화목한 가정생활(74.5%), 사회적인 대인관계(71.5%) 등의 순으로 꼽아 한국 직장인들과 차이를 보였다. 현재 행복한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한국 응답자의 11%, 중국 응답자의 18.5%가 각각 '그렇다'고 답해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은 한국이 37.9%로 중국(28.3%)보다 많았다(News 21 통신사, "행복하려면? 한국은 돈, 中은 건강 - 한국인 11%만 '현재 행복'", 2006. 11. 3).

4) 일반적으로 금전(또는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로 ① 천박한 상업주의의 성행 ② 자연 및 사회 공동체 파괴 ③ 인간의 존엄성 파괴 ④ 도덕성 상실 ⑤ 이기주의의 팽배 ⑥ 과소비 풍조 만연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배금주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폐해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지나치게 돈을 숭배해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강자로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

넷째, 연고주의(緣故主義, nepotism)를 들 수 있다. 연고주의는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이라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그물망으로 혈연·지연·학연 등의 일차 집단적 연고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하고, 이런 행동양식을 다른 사회관계에까지 확장·투사하는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 연고주의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바깥사람이나 집단에겐 배제하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별과 차별을 초래한다. 또한 연고집단 내에는 위계서열에 따른 명령과 복종의 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조직 내 파벌갈등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국가적으로는 지역갈등이나 부패를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적인 노동조합이나 정당도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조직의 헤게모니와 의사결정을 둘러싼 정파 간의 격렬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직이 나누어지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공산당-전평, 진보당, 4월 혁명 정국에서의 진보정당 난립, 1987년 이후 진보운동단체 내부갈등, 민주노동당 내 정파갈등과 이로 인한 분당 등은 진보적인 노동조합과 정당도 연고주의의 문제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조직 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제도의 부재 내지 오작동을 들 수 있다. 진보적인 노동조합과 정당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조직과 정당은 내부에서 성원이나 소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중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절차보다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해 해결하거나 다수결의 이름으로 다수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원들이 인정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없을 경우 조직 내 갈등은 점차로 격화되었고 결국 조직의 분열이나 해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1990년대의 민중당이 그랬고, 2000년대 민주노동당이 그랬다.

이제, 그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주체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한 두 가지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국제정세, 노동자계급의 수를 포함한 객관적 조건은 노동자집단으로서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입신양명·물질주의·연고주의 등과 같은 가치관, 조직의 리더십과 갈등관리는 노동자집단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주체적 요소 중 조직화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치관과 리더십 그리고 갈등관리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은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역할이 각별할

---

은 약자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난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몰두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정의나 윤리 도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정경유착이 생겨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팔고, 기업인은 공무원들에게 줄 비자금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과 국가경제를 살찌워야 할 경제인들이 돈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이에 서민들의 가계는 찌들대로 찌들어 간다. 자연히 각종 사회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서 고생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생겨난다.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현상도 빚어져 몇몇 명문대학에 자식들을 보내기 위해 고액과외가 유행하게 된다.

때다. 그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주체적 요인들을 제거할 방안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